



문화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4부 요인과 여야 5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내빈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

문화상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식서 개헌 논의 필요 강조  
“20대 국회서 개헌 골든타임 이미 지나… 여야 결심 필요  
신뢰받는 국정 운영 위해선 양보·협조하고 경쟁해야”

문화상 국회의장은 제71주년 제헌절인 17일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을 통해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 신뢰도는 최약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동점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다. 일신의 영달을 멀리하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자 고통을 감수했고 신념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의 변경을 고민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대연정을 제안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헌을 시대적 과제로 꼽았다. 이어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볼까 한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바지 않는다”고 보탰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등병 초대 의장과 백범 김구 선생,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리키며 “위대한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을 향해 의회주의의 길을 선택했다”며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꾸자”고 재언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다”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면서 경쟁해야 한다. 신뢰받는 대안정답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고 경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국회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사시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전했다.

문 의장은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러나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리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불이 깊어지고 있다.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는 민생 저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지만, 국론을 모으기에 힘이 부친 현실이다. 강대국들의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금지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겠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제헌 71주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71년”이라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 본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 총 1700여명이 초청됐다. 이번 경축식에서 배우 김남길 씨가 참석해 헌법 전문을 낭독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뉴스

##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전북기업 마지노선 ‘3개월’

익산 광전자 등 대기업 2곳·중소기업 10곳 관련  
애칭가스 등 3개월 비축… 장기화시 피해 확산 우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반도체 업체의 마지노선이 3개월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7일 전북도와 지역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재의 자제,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전했다.

문 의장은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러나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리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불이 깊어지고 있다.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는 민생 저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지만, 국론을 모으기에 힘이 부친 현실이다. 강대국들의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금지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겠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제헌 71주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71년”이라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 본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 총 1700여명이 초청됐다. 이번 경축식에서 배우 김남길 씨가 참석해 헌법 전문을 낭독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뉴스

가스(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축분이 3개월 가량으로 단기적 피해는 없으나 장기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B, C사의 경우 리지스트와 애칭가스를 사용중으로 이들 역시 소재 수출 규제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대기업 2곳을 포함한 12개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에 소재한 대기업 A사는 애칭

전북지역 반도체분야 수출액은 2018년 기준 1억4100만불로 전북 수출액의 1.8%에 해당하며 제품별로는 반도체 디바이스 1억2400만불, 전자 집적회로 1700만불이다.

지역 산업계는 일본의 추가 규제 조항이 확대할 경우 국내업체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며 공급처 다변화 등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 발생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진성 기자

## 논 타작물 재배 사업 농가 ‘급증’

전북도, 신청률 전국 1위 기록  
쌀 수급안정·잡곡 자급률 향상

전북도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벼농사를 타작물로 전환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해 쌀 과잉문제를 해결, 적정 쌀 가격을 안정적 유지와 쌀 식량자급(두류, 서류, 잡곡 등)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목표인 8586ha의 92.3%인 7926ha의 신청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61.1%보다 30%포인트 높아 전국 시도 가운데 신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도는 신청 초기에는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 신청이 부진했으나,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와 도내 타작물 재배 성공사례인 김제 죽산지역 파급효과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올 3월 20일 정부 추가 대책 발표로 ha당 65가마의 별도 공공비축미 참여 농가 배정, 참여농업인 논공 전량수매

와 특등가격 4500원 신설 등 인센티브 강화로 신청 여건이 양호해졌다는 것.

특히 김제시의 경우 전북신청 7926ha 중 논공만 2968ha로 38%를 점유한 지역으로, 김제시 죽산면 죽산농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인근 100ha 이상의 4개 단지(부량, 교월, 진봉, 성덕)가 만들어졌다. 전북도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논 타작물 생산 및 유통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 참여 농가와 쌀 재배농가 모두 올해 수확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생활 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전북도, 올 상반기 501건 상담서비스 제공… 전년 대비 9.6% 증가

전북도는 올 상반기 마을세무사 78명이 501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도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영세사업자 등에게 국제 및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마을세무사는 78명으로, 세무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군 세정부서 문의를 통해 가까운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마을세무사와 협의를 통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올 상반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이용한 상담건수는 5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였으며, 전화상담이 365건(72.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방문상담 129건(25.8%), 팩스·전자우편 7건(1.3%)의 순이었다.

상담내용별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제상담이 398건(79.5%),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상담이 103건(20.5%)이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전북도는 지난 16일 오후 전주시에 71.0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17:55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호우특보는 오후 6시 30분에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도내 최고 강우량은 전주시 71.0mm, 무주군 67.0mm, 남원시 22.8mm 등이고,

도내 평균 강우량은 12.8mm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설피해 접수 현황은 총 35건으로, 주택·상가 등 침수 3건, 도로·하수도 침수 32건이었으며, 모두 배수조치가 완료됐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여

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침수 우려지역 등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시·군의 마을 방송 등을 이용해 도민들에게 호우 대비 사전 행동요령을 전파토록 했으며, TV 자막방송, 긴급재난문자(CBS)등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